

독자권익위원 칼럼

이지안

독자권익위원
잇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지난 주말 광주에 또다시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다. 이에 따라 광주 신안동 일대가 침수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몇 주전 내린 폭우로 지역 내 곳곳이 침수되면서 겨우 복구된 마천 지 얼마 되지 않았건만, 이번 비로 인해 또다시 침수 피해를 보게 됐다.

신안동 뿐만 아니라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있다. 광주만 해도 북구 문흥동, 남구 백운광장, 서구 금호동과 광천사거리, 광산구 선운지구와 평동 일대 등이다. 이 외에도 수많은 지역이 있으며 광주 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마찬가지다.

광산구 선운지구가 고향인 내가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 연일 내린 비로 황룡강 독이 무너진 적이 있다. 성인 남성들의 가슴 높이 정도까지 마을이 물에 잠겼고 마을 주민들이 모두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갔다.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의 어린아이였던 나는 동네 아저씨가 목말을 태워 마을을 빠져나갔던 기억이 있다. 발끝에서 흙탕물이 찰랑거리는데 흙여나 아저씨가 나를 팔아트릴까 봐 얼마나 겁이 나던지.

또 한번은 고등학교 때 영광통 지하차도가 여름철 폭우

로 인해 물에 잠겼었다. 엄마가 그 폭우를 뚫고 학원에 있던 나를 데리러 왔었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 잠겨버린 지하차도를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

그때도 비가 많이 내리긴 했지만 몇년 전부터는 유독 폭우가 내리는 횟수나 시간당 내리는 양이 많아졌다. 이 모든 건 기후변화로 인해 한국의 날씨가 동남아처럼 변해버려서다.

더위가 빨리 찾아왔다가 늦게 물러가 1년 중 여름이 가장 길어졌고 비가 내리면 단시간에 수십 밀리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다. 말 그대로 하늘에서 물을 떨어붓는 것처럼 비가 내리니 지대가 낮은 곳들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대가 낮은 지역들은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돼도 어쩔 수 없는 것일까? 집과 상가가 잡겨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매년 피해를 겪고 있는데도 '지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감수해야 하는 걸까?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는 걸까?

항상 비가 올 때마다 쓰레기나 낙엽이 배수로를 막아 침수가 발생했다. 이를 미리 막기 위해 남구에서는 맨홀 근처에 빗물받이를 설치했지만, 이번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북구는 199억원을 들여 빗물을 저장하는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내년 말이나 완공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비가 내리고 침수가 발생하면 막힌 배수로나 맨홀을 막고 있는 쓰레기와 낙엽을 직접 치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모습들이 뉴스나 SNS 등에 올라올 때마다 사

람들은 의인이다. 멋지다. 고맙다고 한다. 맞다. 그분들은 의인이고 멋지고, 고마운 존재들이다. 한편으로는 마음을 졸이기도 한다. 그분들이 아무 사고 없이 귀가한 것까지 소식을 접했을 때에야 안심을 하는 것이다.

발목 이상 물이 차고 흙탕물이 되면 바닥 상태를 알 수가 없다. 간혹 맨홀 뚜껑이 사라졌는데도 모르고 걷다가 빠지거나, 막힌 배수로를 청소하겠다고 갔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위험하니 일반인이 아니라 공무원이 해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공무원도 똑같은 사람이고 위험 앞에서 생사가 오가는 것도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대신, 공무원들은 지역에서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들을 귀담아듣고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 피해가 눈에 확연히 보이는데도 예산이 없다는 말로 미뤄서는 안 된다. 노후화된 배수로를 정비하고 우수저류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침수 피해를 복구하는 건 외양간을 고치는 것일 뿐 또다시 외양간이 부실해지게 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침수 피해가 생기는 게 한두 해가 아닌데도 매년 반복되는 건 외양간이 부서질 걸 알면서도 내버려두는 것과 같다.

일이 터진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한 다면 손해도 피해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고

RE100 산업단지, 전남이 최적

박민서

전남사회복지협의회장



대학 재입 시절, 지역의 미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대학과 지역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지를 동료들과 논의했던 적이 있다.

특히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을 바탕으로 산학연 협력체계를 만들고, 이를 지역의 산업 정책과 연결해 대학의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 그것이 인구 감소와 기후위기에 대응해 전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진 기억이 있다.

지난 7월 10일 이재명 정부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특별법 제정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며, 그때 나섰던 고민들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RE100 산업단지 정책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에 필자는 깊은 안도감과 기대감을 느끼고 있다.

RE100이란 무엇인가.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협력하여 만든 국제 캠페인으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로 충당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 5월 기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BMW 등 전 세계 447개 글로벌 기업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대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36개 기업이 이에 동참하고 있다.

취재수첩

산사태 대책 마련을

송대영

지역사회부 차장대우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는데 또다시 집중호우가 내려 광주·전남을 할퀴었다.

지난 3일 무안공항의 1시간 최대 강수는 142.1mm를 기록했다. 또 무안 윤남(110.5mm), 광주 광산(89.5mm), 담양 봉산(89mm), 흑산도(87.9mm), 함평 월야(87.5mm), 광주(74.8mm) 등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 광주·전남에 이처럼 큰 비가 내린 것은 광주에 하루

426.4mm의 폭우가 쏟아진 지난 7월 17일 이후 약 2주 만이다.

이 같은 상황에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랐다.

무안에서 1명이 숨지는 인명피해 등 광주 173건·전남 409건의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광주 북구 신안동, 함평전지전통시장 등에 생채기를 냈다.

관련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자들은 침수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에 팔을 걷어붙였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감염병 예방에 대한 이목이 쏠렸지만 관심을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재난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산사태'다.

산림청 산사태 위험등급 통계(2025년 4월 기준)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1·2등급 면적은 총 17만8784ha로

강원(43만2208ha), 경북(35만8510ha) 다음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사태의 발생 원인은 연평균 강수량의 절반 이상 편중된 장마·태풍 등에 의한 집중호우 때문이다.

특히 이전에 내렸던 비로 인해 흙이 물에 가득 머금고 있어 흠과 돌, 나무의 무게로도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전국 시간당 강수량 50mm 이상 폭우가 내린 횟수가 1970년대 7.1회에서 2000년대 18.0회로 30년간 2.5배 이상 증가했다.

산사태는 농촌·산림 지역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도시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연이은 집중호우로 인해 산림 주변에 있는 지역도 결코 안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과거 수치나 기준으로 마련한 제도와 대비책만으로는 앞으로의 재난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근본적인 산사태 대비 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사설

전남 호우 취약지 맞춤형 방어체계 구축을

최근 잇따른 '극한 호우'로 지역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연구원이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남의 홍수 위험 특성 분석 및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는 전남에서 발생한 호우 피해 현황과 지역별 홍수 취약성, 대응 방향을 종합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전남의 자연재해 피해액은 총 4281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77%인 3284억원이 호우피해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2019~2023년까지 5년간 호우피해액이 10년 자연피해액의 96%나 차지했다. 자연재해 피해 대부분이 호우피해라는 얘기다.

지난 7월에도 나주 418mm, 담양 381mm 등 100년에 한번이나 기록될 극한 폭우가 쏟아진데 이어 지난 3일과 4일에도 무안군 무안공항 289.6mm로 대표되는 '극한 호우'가 쏟아져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로 극한호우가 잦아데 도내 홍수 잠재위험지역은 총 961㎢에 달하고 이곳 거주 인구 또한 13만6000여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특히 이중 일부 지역은 지하건축물의 비중이 높고, 저지대 도로도 총 2.2㎢에 이르러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구조적 한계까지 안고 있다. 여기에 도심의 노후된 인프라와 고령 인구의 밀집도 또한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순천, 여수, 구례 등은 홍수위험지역내 고령인구 비율이 33~35%로 나타났고, 목포, 여수, 순천 등 도심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지하공간이 밀집해 있어 구조적 위험성과 대피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취약지역 중심의 선제적 방어 인프라 확충과 예·경보 체계의 고도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가·지방하천의설계 기준을 극한강우 수준으로 상향하고, 해안 저지대의 침수 대응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형 재난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체계화하고 침수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하도로에는 수위 감지센서와 CCTV를 연계한 IoT 기반 자동 차단 시스템 도입도 절실하다. 이상 기후에 대비한 과학적 기반의 예방 중심 관리체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광주·전남 제조업체 신사업 전환 필요하다

광주·전남 제조기업의 절반 이상이 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 포화상태인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자금·시장·인력 등 다양한 제약 요인으로 인해 신사업 전환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제조업체의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 대응 전략 파악을 위해 133개 기업 대상 '미래 신사업 추진실태 조사' 결과, 56.4%가 신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기업은 43.6%였다.

이들 기업이 신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가장 많은 37.4%가 시장·사업성에 대한 확신 부족을 꼽았다. 이어 '자금 등 경영 상황 악화 33.3%, 신사업 아이템 부재 20.0%' 등의 순이었다.

신사업 착수 기업들도 자체 연구 개발(65.5%) 또는 외부 기관·기업과의 협력(29.3%) 등으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대 전망은 밝지 않았다.

응답 기업의 48.3%가 '아직 판단이 어렵다'고 했고 10.3%가 '내부 또는 외부 요인에 따른 추진 차질'로 응답하는 등 58.6%의 불확실한 시장성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거나 부정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이다.

'성과가 기대된다'(22.4%), '성과를 창출했다'(5.2%) 등 긍정적인 답변은 27.6%에 불과했다. 신사업 추진 애로사항으로는 '자금 부족과 조달 애로'(57.9%), '판로 확보·유통 경로 개척'(46.6%), '시장 불확실성'(43.6%) 등을 복수로 응답했다.

문제는 지역 제조업체들이 바라보는 기존 시장 상황도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응답 기업의 58.6%가 주력사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시장포화인 '성숙기'로 평가했고 시장축소인 '쇠퇴기'도 24.8%에 달하는 등 83.4%의 기업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수요증가인 '성장기'는 12.8%, 시장초기인 '도입기'는 3.8%에 불과했다. 시장 내 경쟁상황도 '경쟁 치열'(57.9%), '경쟁업체 턱밑 추격'(21.1%) 등 대다수가 과열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 때문에 이들 기업이 과감히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지원의 맞춤형 컨설팅, 기술 개발 지원, 판로 개척 등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8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